

# 공정무역에서 생산자의 하위주체성 극복과 생산자 주도 지역 발전\*

이 용 균\*\*

## The Overcome of Subalternity for the Producers of Fair Trade and the Ways for Producer-led Regional Development\*

Lee, Yong Gyun\*\*

**요약** : 최근 개도국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공정무역은 공정한 거래를 통해 개도국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으로 주목을 받았다. 본 연구는 공정무역이 개도국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점에 주목하여, 공정무역의 문제를 생산자의 하위주체성이란 맥락에서 고찰한다.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파트너 관계를 강조한 공정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이었다. 하지만, 공정무역은 개도국의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실천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정무역이 공정한 거래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선진국이 주도하는 원조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임을 밝히면서, 개도국의 생산자가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의 실천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로컬은 개발에 대한 인식적 전환, 시장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 자유로서의 발전, 로컬의 개별성을 고려한 발전 방향을 포스트개발의 맥락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공정무역, 하위주체성, 생산자 주도 개발, 자유로서의 발전, 포스트개발.

**Abstract** : Recently global society has been interested in the alleviation of poverty in the developing countries. Fair trade has gotten lots of attention as the new way to release the poor situation of the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the favored trade deal. This research endeavored to reveal the problems of fair trade in the context of the subalternity of producer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Fair trade as a social movement has been carried out under the principle of fairness with the partnership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pursuing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it has been revealed that fair trade is not the right way to overcome the poverty of developing countries. The main reason for the unfairness of fair trade was due to the developed countries led programs which are very similar to aid programs, thus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producer-led development program as a practical performance of the producer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for fair trade. For this development, this research put emphasis on the perceptual transition for development, renewed understanding of market value, development as freedom, and the importance of individuality for local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postdevelopment.

**Key Words** : fair trade, subalternity, producer-led development, development as freedom, postdevelopment.

### 1. 서론

인류가 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다면, 이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발전이란 현재의 모습에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일 것이다. ‘발전’이란 말에는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내재되는데, 사회의 가치는 지배 집단의 담론과 이데올로기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김미숙 외 공역, 2014; 이희재 역, 2010). 산업화를 거치면서 발전(또는 개발)은 경제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

식되었는데, 이때의 성장이란 양적인 확대에 기초한 것이었다. 특히 개발은 낙후된 것을 근대화하는 인간 능력의 확대로 인식되었고(Lawson, 2007), 지성을 갖춘 인간으로의 변화라는 의미를 함축하였다.

1972년 로마 클럽은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개발주의가 지향하는 양적 성장 추구에 따른 삶의 질적 측면의 간과는 개인의 기초수요 충족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을 지적하였다(최민경·이태주 공역, 2013). 성장의 한계에 주목하면서 인권, 인종, 전쟁, 젠더를 비롯한 다양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8014002).

\*\*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yonggyunlee@hanmail.net)

한 사회운동이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분배에 초점을 둔 개발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선진국에 의한 개도국의 종속 관계를 지적하는 종속이론을 비롯하여, 한 국가의 경제가 국가보다 세계에 의해 좌우된다는 세계체계이론이 주목을 받았고, 1980년대 후반부터 친환경적 개발과 세대 간 지속성을 강조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강조되었다(홍성완 역, 2015; Conway and Heynen, 2014; Desai and Potter, 2014).

1930~1970년대까지 국가 주도적 개발 정책을 지향하던 케인스주의가 1980년대부터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로 변화하면서 개발은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탈규제와 민영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민간 자본이 주도하는 다양한 개발을 가져왔고, 개발 효과는 양적 성장과 함께 효율을 지향하게 되었다. 사회와 국가가 추진하는 복지 혜택은 축소되었고, 세계화는 초국가적 기업이 주도하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가속시켰고, 개도국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실패는 개도국의 위상을 악화시켰다.

개도국의 빈곤이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선진국의 원조 없이는 개도국의 빈곤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원조 형태의 지원 정책은 다변화되었다(박경환·윤희주, 2015; 한국국제협력단, 2013; Glennie, 2014). 신자유주의에 따른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하면서 정부가 담당하던 원조의 일부 기능들은 NGO 단체로 위임되었다. 한편으로는 개도국의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글로벌 사회의 인식이 대두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기구 및 정부의 원조 기능을 대행하는 NGO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가난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 바로 공정무역이다(한국공정무역연합, 2010a).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불균형 심화, 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의 한계, 개도국 주도의 발전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응답하고자 선진국의 민간단체가 주도한 개발 프로그램이다. 원조의 차원을 넘어 개도국 생산자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유익한 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하였는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공정무역이었다(한국공정무역연합, 2010b).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적 발전을 지향하였는데, 생산, 유통 및 소비의 상품사슬에서 공정한 거래를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개도국의 자립적이고 공동체

중심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이용균, 2014).

공정무역의 뿌리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라 할 수 있으나, 공정무역이 글로벌 무역의 형태로 확대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초기 공정무역은 자선 단체가 주도하는 구호 활동이 중심이었고, 1980년에는 전문 공정무역 단체가 등장하였고, 2000년대 접어들어 공정무역을 추진하는 선진국의 자선 단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커피를 비롯한 초콜릿, 화훼, 수공예품 등 거래의 범위와 규모가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정무역의 인증제 도입과 라벨 부착은 공정무역의 수요가 확대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주성수 역, 2010).

공정무역은 무역을 통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작은 노력과 실천이란 점에서 사회 전반의 주목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 개발 프로그램이 강구되었으나, 실효를 거둔 경험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무역은 그 실효성을 떠나, 공정한 무역 거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였다(김병연, 2013; 최정숙·조철기, 2009)<sup>1)</sup>. 특히 공정무역이 담고 있는 공정성의 이미지는 무역을 통한 인류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1990년대에 저명한 경제학자인 아마티아 센은 ‘자유로서의 발전’을 주장하였는데, 그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거래와 무역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김원기 역, 2013). 거래와 무역은 개인의 자유 실천과 이를 통한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개도국의 가난이 극복될 수 있다는 주장은 세상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공정무역은 신자유주의의 확대에 따른 선진국과 개도국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주목을 받았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가 확대되면서 1970년대부터 논의되었던 ‘분배를 통한 발전’은 개도국에 적용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개도국의 영세한 농부와 수공업자는 정보 부족과 자본의 한계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개도국 생산자에게 미리 생산 자금의 일부를 지급하면서 원하는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도록 하고, 이러한 판매를 통해 개도국의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르도록 하는 공정무역의 취지는 분배를 통한 발전에 버금가는 개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다(이용균, 2014).

공정무역은 개도국 생산자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아동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미래의 희망을 갖도록 하는 등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정무역의 문제점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났다(Lyon and Moberg, 2010). 공정무역은 기대했던 것만큼 개도국 생산자의 소득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고, 궁극적 목표로 지향했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오히려 공정무역은 개도국 생산자를 선진국의 단체에 종속시킨다는 우려를 낳게 되었다. 또한 윤리적 소비를 통한 공정한 거래는 도덕의 실천이란 맥락에서 학교 현장 교육에서 활용되었으나, 공정무역을 도덕과 시장의 대립적 논리로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었다(김병연, 2013; Lyon, 2014). 이와 함께, 선진국 내에서는 비싼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회의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초기 소비자들은 윤리적 소비라는 차원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소비하였으나 유통 환경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의 유지는 소비자의 지속적 구매를 가져오지 못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과 호의는 줄어들게 되었다.

비록 공정무역이 여러 문제에 직면했다고 하더라도 공정무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공정무역의 문제점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가난한 개도국이 현재의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선진국이 주도하는 공정무역은 개도국 생산자를 하위주체성의 위치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점이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하위주체성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공정한 거래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도국의 생산자가 주도하는 발전 방향은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발의 의미와 해석을 기존의 개발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개발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 인식되는 포스트개발(postdevelopment)의 주장에 주목하고자 한다. 포스트개발은 성장 위주의 개발에 반대하는 일종의 ‘대안적 개발’ 또는 ‘개발의 대안(반-개발)’을 추구하는 것이다(이용균, 2015). 개발

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개발의 방향을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개발이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이다(에스테바, 2010). 이를 위해 포스트개발은 발전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기보다 사회와 공동체의 책임과 연대를 강조하며, 양적 성장을 지향하는 대규모의 개발보다 적정규모의 개발을 지향한다. 포스트개발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점은 포스트개발이 하나의 관점과 이론이 아니란 점이다. 포스트개발은 로컬의 공동체 운동, 단순한 삶을 통한 도덕 및 정신적 성장,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의 탈성장(degrowth), 근대적 개발에 대한 인식론적 제고 등 다양한 관점을 아우르면서 개발주의 성장에 의문을 던지는 관점이다(Agostino, 2007; Escobar, 2007; Peet and Harwick, 2015; Ziai, 2007). 포스트개발은 공정무역에 의한 개도국 생산자의 하위주체성의 문제와 공정한 개발의 추진 방향을 사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포스트개발의 다양한 관점에 기초하여 공정무역의 본질과 공정성을 재해석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공정무역의 추진 방향과 개도국의 발전을 모색하는 비판적 접근을 지향한다. 2장은 공정무역의 공정성 논의를 통한 개도국 생산자의 하위주체성을 살펴보고, 3장은 개도국의 생산자를 하위주체성에 위치시킨 주된 요인이라 판단되는 원조로서 공정무역의 특성을 살펴본다. 4장은 공정한 거래의 실천과 개도국의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

## 2. 공정무역의 공정성 논의

공정무역은 선진국의 단체(유통업자)와 개도국의 생산자 간 파트너 관계에 의한 무역으로,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개도국의 생산자가 생산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선진국 거래자와 일정한 약속에 따라 무역을 하는 일종의 의무교역이다. 공정무역을 주도하는 단체들은 공정무역의 가치를 선진국과 개도국의 파트너 관계와 상생적 발전에 놓으면서, 개도국의 장기적이고 자립적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공정무역의 목표임을 밝히고 있다(한국공정무역연합, 2010a, 2010b, 2011). 하지만, 공정무역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선진국이 주도하는 무역시스템의 특성만 나타나게 되었다. 선진국의 단체는 생산자에게 생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공정무

역이 의도했던 공정성을 해치는 길이 되었다<sup>2)</sup>. 왜 선진국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은 개도국의 발전에 장애로 작용하였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거래 관계에서 공정성은 무엇이고, 공정성과 관련하여 공정무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정성(fairness)이란 공평한 조건과 상황을 일컫는 말인데, 사전에 따르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이고 올바른 성질’을 의미하며, 균형과 정확성이 공정성의 원칙으로 제시된다(Daum 사전, 2016). 공정성의 정의가 이렇다면, 선진국의 가치를 통해 실천되는 공정무역은 공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추진되는 공정무역은 선진국의 공정무역 거래업체(유통·판매업자)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여기에는 개도국 생산자의 목소리가 부재한 상태이며, 이는 결국 개도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 생산 방식을 추진하게 되어, 생산의 효과가 낮아지고 빈곤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원래 공정무역은 공정한 거래를 지향하였으나 어느 순간 선진국 중심의 거래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이 주도한 개발과 원조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대화와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가난과 빈곤은 단순한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 상태’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었다(라흐네마, 2010). 시간에 따른 노동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빈곤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에 나타난 결과로 간주되었고, 근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민의 대상이었던 빈곤은 불신, 감시 및 증오의 대상으로 변화했다(그로네마이어, 2010).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이 추진한 개발주의는 빈곤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었는데, 특히 개도국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것이 개발의 궁극적 목적이 되었다(에스테바, 2010). 빈곤은 오직 개발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고 인식되었고, 저개발 상태는 단순히 무능한 수준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인식되었다(라흐네마, 2010). 개도국은 후진성 극복을 위한 총체적 노력을 강구해야 하였고, 선진국은 개도국의 성장을 위해 적절한 원조를 수행하는 것을 의무라고 인식하였다.

개발주의가 확대되면서 원조의 성격도 변화를 경험하는데, 원래 원조(aid)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었는데, 개발주의 담론에서 원조는 어떤 결

핍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의미가 변화하였다(그로네마이어, 2010). 원조의 의미는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 의미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 의미로 변화하였고, 원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수반하였다. 원조에 대한 요청이 오면, 원조가 필요한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했고, 무엇을 어떻게 원조할 지가 정해졌다. 원조를 받는다는 것은 원조를 제공하는 사람의 의도와 기준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이 되었다. 이제 원조란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제도화되고 전문화된 전략이 되었다(그로네마이어, 2010). 원조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원조의 성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공정무역도 이러한 원조의 의미가 내재된 상태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조 형태의 공정무역은 생산자의 주체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선진국의 단체가 공정무역에 개입하면서 개도국의 생산자는 이들 단체의 요구에 맞는 생산에 의존하는 수동적 자세를 견지하게 되었다. 이제 공정무역은 웬만한 선진국의 자선 단체라면 한번쯤 신경써야 할 자선 사업이 되었다. 이는 공정무역의 본질이 ‘협력’에서 ‘원조’로 변화하는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 개도국에 적합한 개발에 대한 안목이 부족한 다수의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원조 형식의 공정무역에 참여하면서, 공정무역의 공정성에 대한 역설이 나타난다. 즉, ‘개도국 스스로 발전을 기획할 수 있는 ‘실천의 자유’가 배제되어, 공정무역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다.

공정무역은 OEM 생산이 아니다. 어떤 나라에서 품질 좋은 커피 재배에 유리하다 해서 커피 생산을 주문하는 것은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 생산자는 다른 작물의 재배에 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며, 커피 재배에 많은 시행착오가 따를 수 있다. 그 곳 생산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생산자와 주문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정무역의 시작일 것이다. 선진국 유통업자가 원하는 제품을 대리 생산하는 것을 진정으로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정무역의 공정성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은 제품 판매의 수익이 공정하게 분배되는가이다. 공정무역 단체의 주장과 다르게, 미국에서 판매되는 공정

무역 제품의 수익 중에서 단 3%만이 개도국의 사회 환경 개선에 활용된다고 주장이 제기되었다(Syall, 2014). 또한, 슈퍼마켓과 전문 매장에 진열된 공정무역 제품은 정확히 생산 단가가 얼마인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수익의 몇 %가 생산자의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되는지 명시되지 않고 있다(Griffiths, 2012). 어떠한 공정무역 단체도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였고, 지출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공정무역이 불공정하다는 것은 아직 투명한 거래시스템이 제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작동하는 비대칭적 관점으로 추진된다. 선진국은 오랫동안 성장과 개발주의 사고에 빠져있었기에 도움과 배려를 제공하면서도 우월감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암암리에 우리는 그들보다 낫다는 우월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선의의 관점에서 개도국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추진하는 공정무역이 사실은 선진국의 우월주의를 대변하는 수단이 되고 있으며(Sylla, 2014), 특히 걸으면 신사적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종속적 관계를 관찰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선진국이 제시한 공정무역의 가이드라인 중에는 아동 노동의 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선진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아동 노동은 분명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학업에 전념하고 미래의 직업을 위한 역량을 개발할 아동들이 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아동 개인과 가족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커다란 문제이다. 하지만 아동 노동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개도국 농촌의 상황에서 아동이 부모의 농사를 돕는 것은 당연한 행동일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포기한 상태가 아니라면 일정 수준에서 부모를 돕는 것은 가족을 위한 행동임과 동시에,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도우면서 농사뿐 아니라 사회와 전통을 학습하는 계기도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황이 다른 개도국의 농촌을 선진국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지나친 참여이자 간섭일 수 있다.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아동은 교육을 받아야함은 당연하나, 그 실천은 개도국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일 것이다.

공정무역이 작동되는 방식을 조금만 자세히 관찰한

다면, 이는 단순히 비대칭적 관점에서 선진국이 가입하는 수준을 넘어 지배적 관계를 확대하는 특성도 관찰된다. 즉, 공정무역은 개도국 생산자를 서발턴(subaltern)에 위치시킨다. 표면적으로 개도국의 생산자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은 구매자가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현재의 공정무역은 선진국 자선 단체의 자기만족을 위한 거래 시스템으로, 이러한 사고의 내면에는 서구 엘리트주의의 문화적 나르시시즘이 깔려있다(박정원 역, 2013). 스스로의 행동에 권위를 부여하고, 문화적 자기만족 속에서 개도국의 발전을 지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개도국을 선진국에 종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나르시시즘에 의하면, 개도국의 개발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선진국의 개입보다는 개도국의 무능함에 있다. 개도국에 강요되었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개도국이 원칙을 제대로 준수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인식된다(다카하시, 2013). 더 이상 원조는 도와주고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수행되는 자선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란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원조 자체는 고마운 것이나, 원조와 개발이 연계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개발주의자의 관점에서 쉽게 발견된다.

Repley(2013)는 개발의 효과를 Putnam(1994)이 제시한 사회적 가치(사회적 자본)의 맥락에서 해석하면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선진국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선진국이 갖는 사회적 자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김창수·김장생 공역, 2016). 그에 따르면, 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수입과 같은 인센티브이며, 이는 전 세계의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포스트구조주의 학자들과 포스트개발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발전 경로의 역사와 차이를 부정하는 것으로, 개발의 효과와 방향은 어느 사회나 같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선진국 중심의 개발주의 나르시시즘이 강조하는 것은 '선진국의 역할'인데, 상호 연결된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국의 영향력이 중요한 이유는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갖고 있는 유일한 곳은 선진국이며, 개도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모델과 조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정무역은 개발원조와 비슷한 원조성의 형태로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생산자의 하위주체성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 3. 경쟁적 원조로서 공정무역

개발담론은 개도국의 정부와 국민을 원조가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낙후된 상태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한다(Ferguson, 2005). 이 논리에 따르면, 개도국은 원조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선진국은 원조라는 의무를 실천하는 주체가 된다. 공정무역이 원조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공정무역 관련 생산자 및 거래 단체의 수를 통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공정무역 제품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무역 감사기구(FLO-CERT)에 등록해야 하는데, 공정무역의 생산자 단체와 거래자 단체는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3,518개가 존재한다(FLO-CERT, 2016). 많은 단체가 공정무역을 주도 및 참여하고 있으며, 공정무역 감사기구에 등록되지 않는 단체를 고려하면 실제 참여자(단체)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무역 생산 및 거래 단체는 유럽에 1,276개, 북아메리카에 160개, 라틴아메리카에 936개, 아프리카에 537개, 아시아에 584개, 오세아니아에 25개가 분포한다.

공정무역을 주도하는 단체가 성장하듯이 제품(또는 서비스)의 생산자 수도 증가하였다. 2012년 국제공정무역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커피 생산자 및 종사자 수가 580,200명으로 가장 많고, 차와 코코아의 생산자 및 관련 종사자는 1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표1 참조). 농산물 생산 관련 공정무역 종사자는 100만 명을 상회하며, 여기에 수공업품의 생산자를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개도국의 생산자가 공정무역에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커피 수출에서 공정무역 커피가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하다(Dragusanu, et al., 2014). 이는 공정무역 생산자가 매우 영세하고, 공정무역의 참여를 통해 개도국의 생산자가 가난을 쉽게 극복할 수 없음을 반영한다. 개발 경제학자 Collier(2007)의 주장처럼 공정무역을 통해 가난을 극복할 수 없다면, 이는 무역이 아니라 자선에 불과하다.

공정이란 말은 매우 긍정적 이미지를 제공하므로, 공정무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선 단체의 이미지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정무역이 갈수록 공정성의 문제에 휘말리는 것은 아마도 성과를 내야 하는 자선 단체의 상황 때문이라 판단된다. 자선 단체는 초기에

표 1. 공정무역 생산자 및 종사자 수(2012)

구분	생산자 및 종사자 수(명)
커피	580,200
차	258,100
코코아	141,800
면화	66,500
화훼	37,500
사탕수수	37,200
바나나	20,300
과일	18,700
견과류	14,300

자료: Fairtrade International, 2012, Monitoring the Scope and Benefits of Fairtrade.

적립된 기부금에 의해 운영되기도 하지만, 실제 많은 자선 단체는 수익 사업을 병행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한다. 수익 사업은 정부와 기구(단체)의 일을 대행하면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회원을 유지하고 정부와 기구(단체)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 자선 단체는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 공정무역은 성과를 포장하기 매우 용이한 특징을 갖는데, 개도국의 가난한 생산자의 자립을 도와주면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바로 공정무역이라 선전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자선 단체와 기업이 경쟁적으로 공정무역에 참여하게 되면서 공정무역은 일종의 원조성 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Berndt, 2007). 공정무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되는 방식 특히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된다. 글로벌 남북관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성을 갖춘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 해답은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물신화된다. 이런 물신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정무역은 원조의 성격을 띠게 된다.

Moyo(2009)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한 이후 선진국으로부터 약 1조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원조되었는데, 그 돈과 개발의 효과는 어디에 있는지 의문을 던진다(김진경 역, 201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970년대보다 낮은 1일 1달러 정도이다.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고도 과거보다 생활수준이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원조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야기

한다는 것이 원조에 대한 비판적 견해이다. 비록, 서구의 보수주의자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가 없었더라면 수백만 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원조를 통한 개발은 심각한 문제점을 갖는다고 비판적 개발학자들은 지적한다(다카하시, 2013). 원조는 연예인이 동원되고, 구호 단체가 주도하는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였다(김진경 역, 2014). 부자는 동참하여 원조를 위한 기부를 해야 하고, 시민들은 국가가 원조를 수행하고 있음에 뿌듯함을 느껴야 하는 것이 현재의 개발 원조의 모습이요, 개도국은 미안하고 감사하며 또한 부끄러운 마음으로 선진국을 대해야 하는 것이 현재 개발 원조가 제시하는 이데올로기이다.

개발 원조와 원조로서의 공정무역을 비교하면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표 2 참조). 개발 원조는 정부가 주도하고 공정무역은 단체가 주도하지만, 그 목적은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란 점에서 같다. 차이점은 개발 원조는 원조를 통한 발전을 지향하고, 공정무역은 자선을 통한 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옥스팜(Oxfam)을 비롯한 공정무역의 대표 단체들은 종교와 관련하여 설립되었고, 개도국의 가난한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을 선진국에서 판매하는데 관심을 두었다(박진희 역, 2010). 원조가 개발주의 담론에 기초하여 추진되었다면, 공정무역은 부의 분배에 초점을 두면서 개도국 생산자의 자립과 선진국 소비자의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였다.

원조 금액이 증가하고, 원조 관련 기구와 업무가 복잡해지면서 원조는 권력화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 개발 원조는 국가의 권력화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

는데, 원조를 둘러싼 정치적 관계는 상당히 권력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민주주의가 약한 개도국일수록 개발 원조와 정치는 긴밀히 연관되며, 선진국은 원조를 통하여 개도국을 관리 및 통제하고자 한다(김진경 역, 2014). 공정무역을 추진하는 단체도 무역의 규모와 종사자의 규모가 커지면서 권력화의 과정을 경험한다. NGO의 권력화는 권력을 의식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형성 및 확대되는데, 공정무역의 단체도 이러한 권력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주성수 역, 2010).

NGO들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이다. 그러나 이타주의는 때로 오만의 위장이 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항상 사익을 물리치기에 충분한 정신인 것도 아니다. 국제 NGO들은 규모나 명성이 커지면서 수시로 자만하거나 자기도취에 빠져 자신들만이 개발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라고 믿게 될 수도 있다(주성수 역, 2010: 438).

원조성 프로젝트의 내용과 제공 방법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을 것이나, 원조성 프로젝트 자체는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원조에 따른 시민의 불만이 높더라도 원조 당사자들은 예산을 확보하고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등 사업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원의 규모와 재원 확보의 방식이 다르겠지만, 개발 원조와 공정무역의 관련자들은 조직과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예산), 고용, 기부금의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개발 원조에 관련되는 국제기구의 직원만 하더라도

표 2. 개발 원조와 공정무역의 특성 비교

구분	개발 원조	공정무역
운영 주체	· 정부, 구호단체	· 공정무역 단체(협동조합 등), 일부 기업
목적	· 원조를 통한 발전	· 자선을 통한 발전
이데올로기	· 개발주의	· 분배주의
담론	· 개발 담론	· 윤리적 소비
정치	· 국가의 권력화	· 단체(기업)의 권력화
자금 조달	· 시민의 세금	· 시민(단체)의 기부금
수혜자	· 소수의 특권층	· 유통 및 판매업자
결과	· 개도국의 의존성 심화	· 개도국의 신-중속화

자료: 저자 정리

IMF에 2,500명, 세계은행에 10,000명, UN에 5,000명이 있으며, 개발 원조를 지원하거나 전담하는 NGO의 수는 약 25,000개로 추정된다(김진경 역, 2014). 또한, 수원국도 원조를 담당할 직원과 인프라 유지에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이처럼 글로벌 원조는 막대한 조직과 권력의 구조 속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원조의 복잡한 역학 관계 자체가 원조를 지속적 사업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원동력인 셈이다. 세계기구는 원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평가하는데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원조 공여국은 원조의 효과와 이해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대규모의 인력을 투입하고, 관련된 NGO 활동을 모니터링하기에 여념이 없다.

중단 없이 지속되는 원조의 복잡한 역학 관계는 개도국의 원조 수혜 과정에서 엿볼 수 있는데, 2000년대 중반 우간다는 개발 원조와 관련하여 684개의 국제 원조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였다(주성수 역, 2010). 개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각 원조 기관이 요구하는 운영 계획서와 실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684개의 기관이 서로 다른 요구 조건을 제시하므로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서류 작업 때문에 실제 원조 사업의 운영이 차질을 빚을 정도였다. 이처럼 막대한 인력과 사회적 인프라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원조이며, 원조 관련 업무는 원조가 중단되기 전까지 지속된다.

이러한 권력의 복잡한 역학 관계는 공정무역 단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공정무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 자본 및 인프라에 의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옥스팜은 세계의 대표적 공정무역 단체로 공정무역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 원조 사업에 영국과 세계 기구를 대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가난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펼치고자 공정무역을 시작했던 옥스팜은 2016년 현재 전 세계 94개 국가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관련 종사자만 약 26,000명의 대규모 단체로 성장하였다. 2010~2015년 사이 약 2억 명을 대상으로 구호 및 공정무역 활동에 참여했으며, 18개 국가에 독립된 기구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이다. 원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규모가 크고, 관련 사업이 많다는 것은 공정무역이 단순히 자선의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복잡한 권력의 역학 관계 속에서 작동함을 보여준다.

원조와 관련하여 낙관론자들은 원조를 통한 빈곤의

해소를 강조하고, 비관론자들은 책무성 없는 원조 효과의 실패를 강조한다. 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개도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조가 필요함을 강조한다(김진경 역, 2014). 결국 원조 프로그램은 개도국을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위치시키고, 국제관계에서 선진국의 위상은 강화시키는 수단이다. 성장 잠재력은 이미 통제되어 있고, 오직 원조에 의존하는 것이 목숨을 유지하는 길임을 이해시키는 것이 현재 선진국이 주도하는 원조 프로그램의 성격이다.

공정무역의 실패는 그동안 술하게 경험하였던 개발 원조의 실패와 유사하다. 생산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고, 주문자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생산되는 위임 시스템이며, 생산자 스스로 자립을 실천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일부 성공한 사례가 전체의 성공처럼 홍보되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현 공정무역의 실재라 할 수 있다.

원조성 프로젝트로 변질하고 있는 공정무역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겠다. 자선의 규모가 커지면서 공정무역은 수익 사업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기부금의 확보를 위해 연예인이 동원되고, 라벨 제도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면서 윤리적 소비를 자극하고, 자본가와 정치인이 자선이란 이름으로 공정무역을 활용하는 불공정한 무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정무역 단체는 권력화 되었고, 단체의 권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정무역의 확대가 반드시 요구되는 복잡한 권력 관계에 빠져들게 되었다. 지구상의 어떤 개도국도 공정무역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있다. 선진국에서의 떠들썩한 구호의 뒤편에서 개도국의 가난한 생산자들은 빈곤의 늪에서 헤쳐 나올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 4. 생산자 주도 지역발전

발전이란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개발을 지향할 것인지에 달려있다(에스코바, 2010; Peet and Harwick, 2015). 공정무역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개도국의 생산자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공정무역을 포스트개발



(postdevelopment)의 논의로 요약하면, ‘공정한 거래를 추구하는 글로벌 남북의 실천’이라 할 수 있겠다. 공정한 거래의 목적은 교환이 갖는 장점을 서로가 누리는 것이며, 공정무역은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만족감을 주는 거래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누가 누구를 돕는 것이 공정무역이란 등식은 포기해야 한다. 본 연구는 생산자 주도 지역 발전을 관점(이데올로기), 목표와 방향(담론), 실천(수행, 전략)이란 맥락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관점-방향-실천은 서로 연결되고 보완적 관계를 갖는 다중적이고 위상적 구성이다. 개도국 생산자의 발전은 포스트개발의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로컬 주도의 발전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실천은 ‘자유로서의 발전 및 집합적 복리’를 추구하는 것이라 주장하고자 한다.

### 1) 지역 발전의 관점: 포스트개발

공정한 거래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흔히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공정무역의 목표라고 한다. 그렇다면, 중요한 점은 공정무역의 효과가 생산자에게 경제적 수익과 함께 심리적 만족을 주고, 최소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이 생산한 제품과 농산물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진정한 발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바나나를 재배하는 농부는 바나나를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카카오를 재배하는 농부는 초콜릿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생산자의 노동 가치는 단순히 최저 가격을 보장받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포스트개발이 지향하는 발전의 논리이다.

그동안 공정무역 단체들은 개도국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헌신을 했고, 이 점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Clarr and Haight, 2015). 그러나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무역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그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은 아마도 공정무역이 개발담론(개발주의)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개도국 농촌의 후진성 극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 인하여 공정무역은 원조 형태의 프로그램이 되었고, 선진국이 노력하면 개도국의 가난은 극복된다는 이데올로기는 윤리적 소비라는 사회

적 실천을 통해 공정무역에 착근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발전의 의미가 개발에 대한 경로와 역사에 따라 장소마다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고, 발전이란 사회와 역사에 따라 다른 의미와 목적을 지닌 것이라면, 선진국의 문명 수준을 기준으로 개도국의 발전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이며, 또한 발전의 정도가 다름을 후진성이란 이름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이희재 역, 2010; 조효제 역, 2013). 발전의 정도가 다른 것을 후진성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개발주의 담론에 매몰된 시각이다. 모든 것은 관계의 산물이고 변화하는 과정이라면, 발전도 결국은 변화하는 것이다. 발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적 성장을 보이는 ‘선형적 진화’ 또는 ‘선형적 진보’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발전이란 뚜렷하게 정의할 수 없는 매우 모호하고, 명확한 형태를 갖지 않는 불확정성의 상태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사건과 관계들의 교차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한 형태로 나타나고, 경관으로 재현되고, 기억과 흔적을 만들면서 장소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서구의 개발주의 관점은 중세에서 근대로 변화하는 모습을 발전 또는 진보라 인식한다. 현재 개도국의 모습이 과거 유럽의 근대화 이전의 상황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한가? 인류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동일시하는 것은 개발주의의 시각일 뿐인데, 이것을 절대적 진리로 간주하면서 모든 세계인이 따라야 할 가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인식론적 폭력이다(스피박, 2013). 이런 관점에서 다카하시(2013)는 유럽인에 의한 근대화의 독백과 역설을 예리하게 비판한다. 즉, 유럽의 근대화 논리는 헤겔의 논의에서 발견되는데, 동양인은 오직 한 사람만 자유를 알며,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오직 귀족만이 자유를 알았지만, 게르만족은 모든 인간이 자유를 안다는 논리이다. 걸으론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개도국의 발전 방향에 개입한 신자유주의는 발전의 대화를 무시하고 일방적 원칙을 고수한 헤겔적 자기논리의 절대화에 대한 현대판 재현인 셈이다. 선진국의 원조가 현재의 개도국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개도국의 개발 계획에 선진국이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논리가 글로벌 무역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토대로 보여 진다.

공정한 거래의 첫 걸음은 공정무역이 원조나 협력의 관점에서 추진되지 않아야 함을 천명하는 것이다.

즉, 공정무역은 라벨이 붙은 상품을 소비하고, 상품의 소비가 개도국의 가난을 해소한다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한다(Sylla, 2014). 개도국의 가난을 극복하는 주체가 오직 선진국의 정책 결정자 및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은 거부되어야 한다. 공정무역은 선진국이 수행하는 자선이 아니며, 도덕과 윤리적 실천을 통한 위안의 대상도 아니다. 성과와 효과를 강조하는 현재의 원조 지향적 공정무역 시스템은 생산자의 잠재적 역량을 훼손시키고, 생산자의 피로 현상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중심, 즉 로컬 중심의 개발이란 목표와 방향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 2) 지역 발전의 방향: 로컬 주도의 개발

개도국의 생산자가 선진국으로의 의존성과 종속성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공정한 거래를 실천한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해진 생산 지침보다는 자기 스스로 생산을 기획하는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자의 하위주체성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공정무역을 추진하는 선진국의 단체들은 생산 현장에서 생산자의 고통을 듣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자의 의견은 수렴되나, 실제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생산자가 처한 하위주체성이라 할 수 있다.

하위주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엘리트에 의한 의식과 기록을 전복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박정원 역, 2013). 공정무역은 개도국의 생산자가 밑그림을 그리고 선진국 또는 개도국의 소비자가 소비하는 패턴이어야 한다. 만약, 개도국의 생산자가 개인적 수준에서 무역을 주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조합 단위의 생산을 지향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선진국으로의 시장 판매에 앞서 현지 시장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라틴 아메리카의 농부들이 빈곤의 상태에 빠진 것은 1970년대 농작물의 수출 가격의 하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박진희 역, 2010). 수입이 감소하자 당황한 농민들은 수출 위주의 작물로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해당 작물의 수출 가격은 하락하였다. 수출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투자했던 자금은 회수되지 않았다. 더욱이 자신들이 포기했던 작물은 선진국으로부터 수입되었는데 그 값은 비쌌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농민은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미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하였고, 그 결과 로컬 경제는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라틴 아메리카의 사례가 주는 교훈은 선진국의 시장만을 고려한 공정무역의 생산 시스템은 선진국으로의 종속 관계를 이끈다는 점이다. 로컬에서의 수요 창출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로컬이 있어야 글로벌도 존재하는 것이다(Lyon, 2014). 또한 개도국 간 공정무역의 거래를 추진하는 것도 선진국으로부터의 종속 관계를 벗어나는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로컬 스스로 자구책을 찾는 첫걸음은 로컬을 다시 배우는 과정일 것이다. 이는 Pitt(1976)가 제시한 ‘아래로부터 개발’과 밀접히 관련된다.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형평, 민주주의, 사회적 정의를 포괄하는 로컬의 ‘공정한 발전’이 중요한데(Clark, 1991), 이러한 로컬의 발전은 일종의 대안적 개발로서 포스트개발이 지향하는 강조 중의 하나이다. 이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내생적이고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는 발전 방향이다. 로컬 주도의 개발은 지역 스스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기에, 성공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될 것이다.

개도국에서 로컬 중심의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인데, 현재 개도국이 직면하고 있는 빈곤에 대한 여러 요인 중의 하나는 선진국이 부과하는 무역 장벽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통상적으로 수입품에 약 1.6%의 관세를 부과하나, 방글라데시, 네팔, 캄보디아 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약 14~1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주성수 역, 2010). 이는 미국의 농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역으로 말하면 이들 국가의 영세한 농부들이 미국으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도국의 로컬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 로컬의 상황을 이해하고, 글로벌 스케일에서 연대의 정치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로컬의 공정무역 생산자들은 선진국의 공정무역 단체와 협력하여 선진국이 쌓아 올린 무역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의 정치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공정무역 단체의 주문에 맞춘 생산에 앞서, 로컬이 선진국의 공정무역 단체에 요구할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협력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개도국의 로컬은 선진국에 유리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특허와 지적재산권은 개도국의 로컬 발전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주성수 역, 2010). 선진국은 산업화를 통해 많은 분야에서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으나, 후발주자인 개도국은 선진국의 특허와 지적재산권에 의존하는 입장이다. 개도국 입장에서 선진국의 지적재산권 사용은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윤리적 차원을 떠나 단순히 발전의 맥락에서 보자면, 특허와 지적재산권은 이미 부유해진 대상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개도국을 선진국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글로벌 남부의 발전과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특허와 지적재산권의 적용 범위와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적재산권이 개도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면,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글로벌 남북관계의 공정성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무역 관계에서 선점 효과보다 공유를 통한 상호 발전이 포스트개발이 지향하는 것이다. 이처럼 로컬 중심의 발전이란 단순히 생산을 확대하고 선진국으로의 판매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서 로컬이 처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 및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로서의 발전과 로컬의 집합적 복리에 대한 추구를 통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3) 지역 발전의 실천: 자유로서의 발전과 집합적 복리

전술한 바와 같이, 개발(또는 발전)은 사회 활동에서 개인적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이어야 한다(김원기 역, 2013). 공정무역은 자유로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난, 박탈, 탄압, 인프라 미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발전은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이므로, 공정무역은 개도국의 생산자에게 최대한의 자유가 부여되어야 한다. 공정한 거래는 시장제도에서 벗어나지는 것이 아니다(Varul and Wilson-Kovacs, 2008). 오히려 시장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이는 시장 교환에서 생산자의 가치가 존

중되고,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가치가 더 중요시되는 사회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시장을 통하지 않는 발전이란 불가능하며, 공정무역은 시장 거래 속에서 자유가 확대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의 확대는 행위자의 행동 변화를 통해 가치를 산출할 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삶의 풍요를 가져오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한 지역이 자유로서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 장소는 고립된 상황 속에서 그 장소만의 고유한 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고유성(uniqueness)을 갖는다. 이는 장소의 개별성(individuality)으로 이해되는데, 장소마다 각각 다른 개별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유로서의 발전은 장소마다 다른 것이며, 장소마다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가치관, 환경, 종교 등의 여건이 다르다. 자유로서의 발전은 자유를 제한시키는 요소를 극복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주체성의 회복인 것이다. 커피의 재배와 유통 조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 무리하게 공정무역 커피를 생산하는 것은 자유로서의 발전이 아닌 것이다. 지역의 특성에 잘 부합되고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아이템을 지역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Escobar(2012)는 지역 주민 스스로 개발을 정의하고 이를 실천하는 사회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에 의하면, 진정한 개발이란 물질적 성장이 아니라 사회의 총량적 발전으로, 집합적 복리(collective well-being)는 사회가 추구할 최고의 발전 전략이란 것이다. 이는 인간-공동체(지역사회)-자연의 동시적 발전을 지향하는 것으로 공정무역도 이러한 원리를 추구하는 개발 프로그램으로 추진될 때 진정한 로컬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개도국 상황을 고려할 때, 로컬이 주도하는 사회의 총량적 발전은 단기간에 성취되기 힘들 것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인간-사회-자연이 일체되는 발전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지역 발전이란 로컬의 제도화된 실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총량적 발전에 대한 비전 수립과 이에 대한 실천은 로컬 주도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선진국은 개도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자신이 걸어온 발전의 사다리를 다시 놓아 주어야 할 것이다.

## 5. 결론

공정무역은 무역을 통해서도 글로벌 사회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다. 대자본이 주도하는 시장경제의 틈새만 잘 활용하여도 개도국의 농촌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어졌다. 하지만 공정무역이 추진될수록 개도국 농촌의 발전은 눈에 띄지 않고 오히려 선진국의 공정무역 단체에 종속되는 느낌마저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정한 거래를 통한 개도국의 발전을 논의하고자 시도되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정무역은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는 선진국이 주도하는 무역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라고 본 연구는 주장하였다. 개도국 빈곤에 대한 연민은 원조 성격의 공정무역이 출현되는 계기가 되었고, 생산의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고 제품에 대한 요구조건이 제시되면서, 공정무역은 개도국 스스로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도국의 생산자를 돕는 착한소비로서 물신화된 공정무역은 선진국의 자기만족을 위한 거래 시스템으로 발전하였고, 선진국이 주도하는 개발주의가 전 세계에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진국이 개도국의 개발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개발을 본질주의적으로 사고하는 것으로, 개발의 방향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선진국의 조언에 따라 개발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이런 본질주의적 개발관은 지역 마다 특수한 역사적 발전의 과정,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현실을 간과하기에 문제가 되며, 특히 개도국의 엘리트로 하여금 선진국 따라하기를 강요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원조성 프로젝트로 변하게 된 공정무역은 주문자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 생산이 전개되는 종속적 관계를 야기하였고, 공정무역 단체의 규모가 커지고 기업화되면서 공정무역은 수익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되었다. 공정무역은 자신의 차원을 넘어 개발 프로젝트로 변모하게 되었고,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권력 관계에 연루되는 모습을 가져오게 되었다.

본 연구는 개도국 생산자가 주도하는 공정한 거래의 실천을 모색함과 동시에, 개도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발에 대한 인식적 전환이 필요하다. 중세를 거치면서

교회와 왕정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민, 지식, 그리고 공정한 거래의 장소로서 시장이 중심이 된 근대화를 이룩한 서구의 노력은 찬사받기에 충분하나, 근대화의 논리로서 발전을 규정하는 서구의 비대칭적 관점의 개발 나르시시즘은 전복될 필요가 있다.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다른 발전의 역사와 모습을 취해왔다는 것이며, 하나의 관점과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자기 중심적 사고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개발의 방향은 하나가 아니라 로컬마다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

둘째, 시장의 가치를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 일부 포스트개발 학자들은 '절제된 성장'을 강조하고 자본주의 가치보다 전통사회의 가치를 존중할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노다, 2013). 근대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의 가치보다 경제의 가치가 강조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으나, 시장 시스템 자체가 거부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공정한 거래를 통한 공정무역은 시장 시스템을 통해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생산 관계의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생산의 부가가치가 형평에 맞도록 분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공정무역은 생산자의 가치 창출이 존중되는 시스템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유로서의 발전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공정무역은 개도국의 생산자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요소를 개도국의 로컬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진국의 배려일 것이다. 이는 단순히 원조, 또는 파트너 관계를 통한 개발이 아니라, 진정으로 개도국의 생산자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도국의 농촌이 극복하기 힘든 무역 장벽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선진국 내, 또는 글로벌 차원에서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개도국을 위한 진정한 도움일 것이다. 자유로서의 발전은 개인의 실질적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빈곤은 소득이 낮아서가 아니라 기초 역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김원기 역, 2013).

넷째, 로컬의 개별성이 고려된 발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로컬은 친숙한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연대 의식을 고취시킬 사회적 자본을 갖추고 있다. 모든 로컬의 사회적 자본이 발전 가능성을 갖는 것은 아니겠지만, 로컬의 총량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로컬의 상황에 맞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문헌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개발은 로컬의 제도화된 실천이란 점이다. 개발은 특정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이며, 사회적 관계의 실천이다. 따라서 로컬 스스로 발전이 무엇이며 집합적 복리로서 사회의 비전은 어떻게 계획 및 실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개발이란 결국 인간의 사회에 대한 인식과 가치이며, 곧 사유 체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정무역 생산자의 하위주체성이 갖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정한 거래의 실천을 통한 개도국 생산자의 발전 방향을 연구하였으나, 많은 연구의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현장 조사를 통한 생생한 로컬의 실상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고, 다양한 개발의 이론과 관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이 연구에서 부족한 점은 다음 연구에서 보완할 계획이며, 개발 지리학에 대한 관심이 국내 지리학 내에서 확대되어 포스트개발을 비롯한 로컬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지리학 내에서 활성화되길 희망한다.

주

- 1) 공정무역은 세계의 시민성 함양이란 맥락에서도 주목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공정무역의 장점과 윤리적 소비의 중요성이 언급되기도 하였다(최정숙·조철기, 2009). 김병연(2013)은 교과서에 진술된 공정무역 내용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비 실천의 긍정적 효과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공정무역이 갖고 있는 부정적 기능도 동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는 매개체란 점에서 공정무역에 내재하는 장점과 단점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고, 윤리적 소비가 갖는 물신주의의 한계에서 벗어나면서 진정한 글로벌 시민의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도록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2) 공정무역은 개도국의 생산자가 자유롭게 작물을 재배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한국공정무역연합 역, 2010a). 생산 가격과 판매량, 생산 방법(유기농 재배, 친환경적 재배), 노동(아동 노동 금지 등), 인증과 라벨 부착 등이 공정무역 단계로부터 제시되고 생산자는 이에 따른 생산을 하게 된다. 생산자는 상황에 따라 다른 품종이나 제품을 다른 방식으로 생산하고자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거부하기 힘들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과정은 길고 복잡한데, 생산 요구서의 내용은 쉽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의 과정에서 생산자의 주장은 간과되기 쉽다는 점이다. 이는 선진국의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개도국의 생산 방식과 삶이 결정되는 일종의 신-종속주의 현상이다.

김미숙, 김용학, 박길성, 송호근, 신광영, 유홍준, 정성호 공역, 2014, *현대 사회학*, 을유문화사(Giddens, A. and Sutton, P. 2013, *Sociology*, 7<sup>th</sup> Ed, Polity Press, Cambridge).

김병연, 2013, 윤리적 소비의 세계에서 비판적 지리교육: ‘공정무역’을 통한 윤리적 시민성 함양,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3), 129-145.

김원기 역, 2013, 자유로서의 발전, 갈라파고스(Sen, 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Anchor Books, New York).

김진경 역, 2012, 아프리카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죽은 원조, 알마(Moyo, D., 2009, *Dead Aid: Why Aid Is Not Working and How There Is A Better Way For Africa*, Farrar, Straus and Giroux, New York).

김창수·김장생 공역, 2016, 개발의 이해: 제3세계에서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Rapley, J., 2013, *Understanding 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in the Third World*(3rd Ed.), Routledge, London).

그로네마이어, 2010, 도움: 세련된 간섭, 이희재 역, 2010,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서울(Sachs, W., 2009, *The Development Dictionary: A Guide to Knowledge as Power*, Zed Books, London), 125-158.

노다 마사토, 2013, 신 개발 패러다임과 자족경제: 동남아시아의 관점에서, 최민경, 이태주 공역, 개발학자 17인, 국제개발을 성찰하다, 아르케, 서울(西川潤, 下村恭民, 高橋基樹, 野田真里, 2011, 開發を問い直す: 転換する世界と日本の国際協力), 123-145.

다카하시 모토키, 2013, 독백에서 대화로, 최민경, 이태주 공역, 개발학자 17인, 국제개발을 성찰하다, 아르케, 서울(西川潤, 下村恭民, 高橋基樹, 野田真里, 2011, 開發を問い直す: 転換する世界と日本の国際協力), 145-160.

다흐네마, 2010, 참여: 교묘한 통제의 방법, 이희재 역, 2010,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서울(Sachs, W., 2009, *The Development Dictionary: A Guide to Knowledge as Power*, Zed Books,

- London), 251-280.
- 박경환·윤희주, 2015, 개발 지리학과 국제개발협력 (IDC)의 부상,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3), 19-43.
- 박정원 역, 2013, 하위주체성과 재현: 라틴아메리카 문화이론 논쟁, 그린비(Beverly, J., 1999, *Subalternity and Representation: Arguments in Cultural Theory*, Duke University Press, London.)
- 박진희 역, 2010, 커피의 정치학: 공정무역 커피와 그 너머의 이야기, 사람의무늬, 서울(Jaffee, D., 2007, *Brewing Justice: Fair Trade Coffee, Sustainability, and Surviva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사토우 진, 2013, 개발 연구의 보편성과 특수성, 최민경, 이태주 공역, 개발학자 17인, 국제개발을 성찰하다, 아르케, 서울(西川潤, 下村恭民, 高橋基樹, 野田真里, 2011, 開發を問い直す: 転換する世界と日本の國際協力), 161-180.
- 스피박 가야트리, 2013, 개발을 보완하다, 최민경, 이태주 공역, 개발학자 17인, 국제개발을 성찰하다, 아르케, 서울(西川潤, 下村恭民, 高橋基樹, 野田真里, 2011, 開發を問い直す: 転換する世界と日本の國際協力), 325-350.
- 에스테바, 2010, 발전: 두 개로 나뉜 세계, 이희재 역,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서울(Sachs, W., 2009, *The Development Dictionary: A Guide to Knowledge as Power*, Zed Books, London), 33-70.
- 이용균, 2014, 공정무역의 가치와 한계: 시장 의존성과 생산자 주변화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2), 99-117.
- 이용균, 2015, 서구 중심적 개발담론의 재해석과 지속가능한 개발로서 포스트개발의 미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1), 137-152.
- 이희재 역, 2010, 반자본 발전사전, 아카이브, 서울 (Sachs, W., 2009, *The Development Dictionary: A Guide to Knowledge as Power*, Zed Books, London).
- 주성수 역, 2010, 빈곤에서 권력으로: 국가와 시민은 어떻게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매진, 서울(Green, D., 2008, *From Poverty to Power: How Active Citizens and Effective States Can Change the World*, Oxfam International, Dorset).
- 조효제 역, 2013,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서울(McMichael, P.,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 Sage, London).
- 최민경, 이태주 공역, 2013, 개발학자 17인, 국제개발을 성찰하다, 아르케, 서울(西川潤, 下村恭民, 高橋基樹, 野田真里, 2011, 開發を問い直す: 転換する世界と日本の國際協力).
- 최정숙, 조철기, 2009, “지리를 통한 세계시민성교육의 전략 및 효과 분석: 커피와 공정무역을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7(3), 239-257.
- 한국공정무역연합 역, 2010a, 공정무역: 시장이 이끄는 윤리적 소비, 책으로보는세상, 서울(Nicholls, A. and Opal, C., 2005, *Fair Trade: Market-driven Ethical Consumption*, Sage, Trowbridge).
- 한국공정무역연합 역, 2010b, 소비자와 생산자와 기업 모두에게 좋은 공정무역의 힘, 시대의창, 서울 (Fair Trade Advocacy Office, 2006, *Business Unusual-Successes and Challenges of Fair Trade*, Bruxelles).
- 한국공정무역연합 역, 2011, 공정무역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수이북스(Bowes, J., 2011, *The Fair Trade Revolution*, Pluto Press, London).
- 한국국제협력단, 2013,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한울.
- 홍성완 역, 2015,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 21세기북스(Sachs, J., 2015, *The Age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 Agostino, A., 2007, Post-development: unveiling clues for a possible future, in Ziai, A.(ed), *Exploring Post-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problems and perspectives*, Routledge, London, pp.197-211.
- Bdendt, C., 2007, Does fair trade coffee help the poor?: evidence from Costa Rica and Guatemala, Mercatus Policy Series, No. 11., George Mason University.
- Claar, V. and Haight, C., 2015, Is fair trade worth its cost?, *Faith & Economics*, 65, 25-34.
- Clark, J., 1991, *Democratizing Development: the Role of Voluntary Organizations*, Kumarian

- Press, West Hartford.
- Conway, D. and Heynen, N., 2014, Dependency theories: from ECLA to Andre Gunder Frank and beyond, in Desai, V. and Potter, R., (eds.), *The Companion to Development Studies* (3rd ed.), Routledge, London, pp.111-115.
- Desai, V. and Potter, R., (eds.), *The Companion to Development Studies* (3rd ed.), Routledge, London.
- Dragusanu, R., Giovannucci, D., and Nunn, N., 2014, The economics of fair trad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8(3), 217-236.
- Escorba, A., 2007, 'Post-development' as concept and social practice, in Ziai, A. (ed), *Exploring Post-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problems and perspectives*, Routledge, London, pp.18-32.
- Escorba, A., 2012, *Alternatives to development: an interview with Arturo Escobar*, <https://www.transitionculture.org/2012/09/28/alternatives-to-development-an-interview-with-arturo-escobar>(접속일자: 2017-01-04).
- Ferguson, N., 2005, *Colossus: the Rise and Fall of the American Empire*, Penguin Books, New York.
- Fridell, G., 2007, *Fair Trade Coffee: The Prospects and Pitfalls of Market-Driven Social Justic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Toronto.
- Glennie, J., 2014, Aid effectiveness, in Desai, V. and Potter, R., (eds.), *The Companion to Development Studies*(3rd ed.), Routledge, London, 551-554.
- Griffiths, P., 2012, Ethical objections to Fairtrade,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5(3), 357-373.
- Henrici, J., 2010, Naming rights: ethnographies of fair trade, *Fair Trade and Social Justice: Global Ethnographies*, New York University Press, New York, 282-298.
- Lawson, V., 2007, *Making Development Geography*, Hodder Arnold, New York.
- Lyon, S., 2014, Fair trade towns USA: growing the market within a diverse economy, *Journal of Political Ecology*, 21, 145-160.
- Lyon, S. and Moberg, M.(eds.), 2010, *Fair Trade and Social Justice: Global Ethnographies*, New York University Press, New York.
- Lyon, S., 2010, A market of our own: women's livelihoods and fair trade markets, in Lyon, S. and Moberg, M.(eds.), *Fair Trade and Social Justice: Global Ethnographies*, New York University Press, New York, 125-146.
- Lyon, S. and Moberg, M.(eds.), 2010, *Fair Trade and Social Justice: Global Ethnographies*, New York University Press, New York.
- Peet, R. and Harwick, E., 2015, *Theories of Development: Contentions, Arguments, Alternatives*, 3<sup>rd</sup> Ed., The Guilford Press, London.
- Pitt, D., 1976, *Development from Below: Anthropologists and Development Situations*, Mouton, Hague.
- Putnam, R., Leonardi, R., and Nonetti, R., 1994,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Sylla, N., 2014, *The Fair Trade Scandal: Marketing Poverty to Benefit the Rich*, Ohio University Press, Athens.
- Varul, M. and Wilson-Kovacs, D., 2008, Fair trade consumerism as an everyday ethical practice: a comparative perspective, ESRC-funded Research Project, University of Exeter.
- Ziai, A. (ed), 2007, *Exploring Post-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problems and perspectives*, Routledge, London.
- 교신 : 이용균(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yonggyunlee@hanmail.net)
- Correspondence : Lee, Yong Gyun(Assistant 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77 Yongbong-ro, Buk-gu, Gwangju, 500 -757, Korea)(yonggyunlee@hanmail.net)
- (접수: 2017.01.25, 수정: 2017.02.08, 채택: 2017.02.13)